

| KMI가 뽑은 2018년 해양수산 뉴스 분야별 TOP 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해운·항만·국제물류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중요했거나 사회적 반향이 컸던 뉴스 TOP 5를 선정하였다.

2018 KMI가 뽑은 해양수산 분야별 뉴스 TOP 5



해양공간계획 도입



남북 최초 공동
수로조사 실시



일본의 독도 도발 지속



미세플라스틱의 경고



바다모래 채취 갈등 지속



어촌뉴딜 300 추진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수산물 WTO 1심 패소



김 재고량 증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조선수주량,
세계1위 탈환



한·중·일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부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치 갱신



항만자동화
노사정 소통



항만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붉은 불개미 출현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시급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험운항 성공



남북철도 공동조사



블록체인 열풍



신북방정책 추진



신남방정책 추진

해양분야



해양공간계획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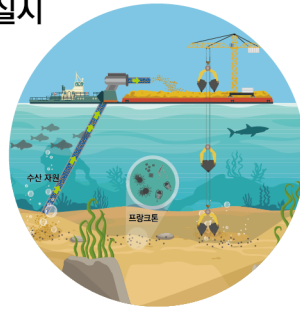
남북 최초 공동
수로조사 실시



일본의 독도 도발 지속



미세플라스틱의 경고



바다모래 채취
갈등 지속

바다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선점식 이용방식에서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으로 바다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뀔 예정이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 실시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하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했다. 수로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수립 등 일본의 독도 도발 지속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3월 30일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시하고, 7월 17일에는 해설서를 개정해 시행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겼다. 이에 앞선 1월 25일에는 도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식탁으로 되돌아 온 미세플라스틱의 경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고래 사체가 발견되고, 사람의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이 수산물과 식수를 통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 업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업인과 골재업자 간 갈등 심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다모래 채취를 막으려는 어업인과 골재채취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 태안과 인천 옹진해역에도 바다골재 채취예정지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서는 등 어업인과 골재채취업자, 정부 간 갈등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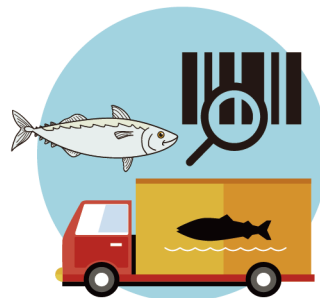
수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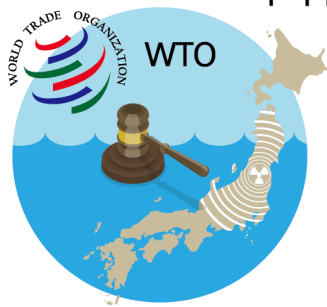
어촌뉴딜 300 추진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 합의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



수산물 WTO 1심 패소



김 재고량 증가

해양수산부, 지역·생활밀착형 어촌혁신 ‘어촌뉴딜 300’ 추진

해양수산부는 향후 4년간(2019~2022년)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낙후된 선착장과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어항을 통합해 특화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을 추진한다. 이에 9월 11일 ‘어촌뉴딜 300’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5주간 공모를 거쳐 연말에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서해평화수역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남북이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았지만, 모든 군사행위가 중단된 해역에서 남북 어민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조업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생굴·굴비부터 시범운영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율참여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WTO는 2018년 2월 22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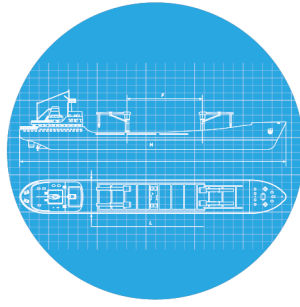
수출효자 ‘김’, 생산 증가로 재고량 급격히 증가

양식시설량 증가에 따른 김 생산 증가가 재고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김 시설량은 101만 8,438척으로 2017년 보다 14.7%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김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가 정체된 상태에서 김 수출 실적이 생산량 증가에 미치지 못해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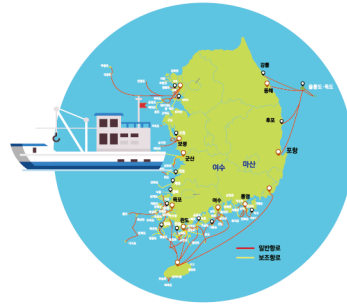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조선수주량, 세계1위 탈환



한·중·일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5일 공식 출범

정부가 설립방안을 공식 발표한지 11개월만인 7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 확정

‘해운재건 5개년(2018~2022년) 계획’이 4월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세계 5위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탈환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1,026만CGT)를 수주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 달성이 유력한 상태다. 그러나 수주잔량은 중국(2,781만CGT), 한국(2,064만CGT), 일본(1,332만CGT) 순으로 여전히 중국에 1위를 내준 상태다.

한·중·일,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 국제표준화에 공동대응 추진

한중일 3국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역내 시험운항과 국제 표준화에 공동 대응·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IoT 기반의 해운장비 디지털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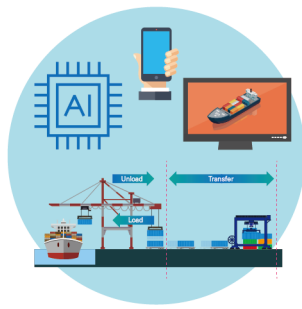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도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분야



부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치 갱신



항만자동화
노사정 소통



항만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붉은 불개미 출현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시급

부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치 갱신, 지난해보다 약 6% 증가, 세계 5위로 복귀

부산항만공사는 11월 28일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부산항 물동량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기준 2,167만 4,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달성되면 물동량이 작년보다 약 6%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세계 5위로 복귀하게 된다.

항만자동화 도입에 노사정 소통 채널 가동

해양수산부는 10월 24일 '항만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향후 항만자동화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환경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에 국비 10억 2,500만 원을 투입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항만의 불청객, 붉은 불개미 또다시 출현

금년 3월부터 12개 항만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하여 붉은 불개미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5월에는 합동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6월 평택항과 부산항, 7월 인천항, 9월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는 등 작년에 이어 불개미 출현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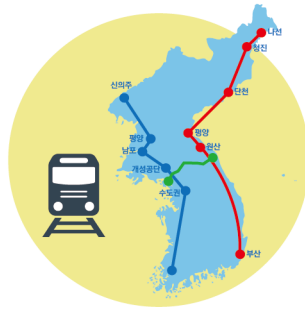
안전사각지대,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대책 시급

올해 부산항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항만노동자 재해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2배 높고, 항공운수산업에 비해 6배 가까이 높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조직을 개편하면서 '재난안전부'를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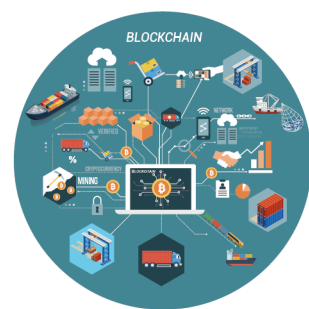
국제물류분야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험운항 성공



남북철도 공동조사



블록체인 열풍



신북방정책 추진



신남방정책 추진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박 북극항로 시험운항 성공

8월 27일 부산신항을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시험운항에 성공하면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철도 공동사업 추진-2018 남북철도공동조사

남북은 철도 공동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8일 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수행했다. 북한의 철도 시설,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북측공동조사단과 결과 공유 및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구간: 1,200km/ 경의선구간(개성~신의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

국제물류에 부는 블록체인의 열풍

블록체인운송연맹(BiTA)에 페덱스, UPS, 펜스크, BNSF 등 약 400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물류에 블록체인의 영향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7월 18일 BiTA에 공식 가입하였고, 관세청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러 극동 및 북한 항만 개발을 통해 신북방정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러시아 슬라반카항 항만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선 5월에는 인천항만공사가 남북경제협력TF를 구성했고, 부산항만공사는 북방물류개척단을 구성해 환동해안권 물동량 증대방안을 논의했다.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해양수산부는 인도·아세안 시장 진출 및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을 위해 지난 4월 제2차 한·인도네시아 해양공동위, 한·인도 해양협력포럼 등을 개최했다. 또한 10월에는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4개 항만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를 수행하는 등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